

국회 '미래한국 헌법연구회' 광주 개헌 토론회

“새 헌법에 ‘지방분권 강화’ 명시해야”

정치권을 중심으로 개헌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새 헌법에 중앙과 지방의 상생을 위해 지방 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개헌 연구를 위한 의원 모임인 국회 '미래한국 헌법연구회' 주최로 27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정부형태와 지방분권, 바람직한 개헌 방향은'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주민 참여를 본질로 하는 지방자치의 보장하고 분권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개헌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조성규 전북대 교수는 "지방분권과 헌법개정의 과제"라는 발제문을 통해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며, 적극적으로 지방자치의 기능을 보장하기에 불충분하다"면서 "지방자치와 관련있는 중앙 정부의 정책 형성에 지방 정부의 참여를 보장하는 한편 자치입법권, 재정권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헌법도 지방자치제와 지방 분권을 언급하고 있지만 선언적 내용을 담는데 그쳐 개헌 논의시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이어 "지방자치에 '민주주의의 초등학교'라고 표현되는 것은 지방자치에 가지는 법적 의미, 특히 헌법상 기본이념의 실현에 있어 본질적이고 불가결한 요소임을 의미한다"면서 "지방자치에 헌법상의 기본이념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의 '초등학교'를 설치·개교하는 것만으로 충분할 수 없으며, 결맞는 교육과정과 교육제도가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또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회 구성의 헌법 명문화 ▲지방자치단체의



개헌 연구를 위한 의원 모임인 국회 '미래한국 헌법연구회'는 27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정부형태와 지방분권, 바람직한 개헌 방향은'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지방분권, 정부형태 등 개헌 주요 쟁점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중앙정부 정책 지자체 참여 시켜야 자치입법권·지방정부 재정권 보장도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지자체가 제정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 마련 ▲지방자치와 관련있는 중앙 정부의 정책 운영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참여 보장 ▲자치입법권과 자주재정권의 보장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병록 조선대 교수도 이날 지방 분권을 위한 개헌 필요성과 관련, "중앙정치와 정부의 과도한 권한은 업무 과중으로 인한 기능 마비에 걸려 있으며 지방정치와 정부는 과소 권력으로 원기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국가 재구조화로서

의 국가권력의 지방분권은 지방과 중앙의 기능 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이의 대통령 중임제, 의원내각제, 분권형 대통령제 등 정부형태를 비롯해 헌법 전문에 5·18정신 계승 부분 삽입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국회 미래한국헌법연구회는 이주영(한나라당)·이낙연(민주당)·이상민(자유선진당)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으며, 의원 179명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회 연구단체로, 이날 호남지역 토론회에 이어 28일에는 부산에서 지역 순회토론회를 개최한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직업관련 상임위 활동 제한

광주시의회 조례 유명무실

겸직 신고 의무 규정 없어

직무 연관 여부 파악 못해

광주시의회의 직업 관련 상임위원회 활동을 제한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가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 2006년 9월 의원들의 겸직으로 인한 이해충돌을 막을 방안으로 '광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운영중이다.

조례안(5조)은 '의원은 자기 직업과 관련된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직업과 관련된 상임위 활동을 하게 될 경우 이해관계에 휘둘릴 수 있다는 점에서다.

하지만 조례안은 겸직의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의원들이 겸직 여부를 스스로 밝히지 않을 경우 직무와의 연관 여부를 파악하기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지난달 이뤄진 하반기 원구성도 해당 의원이 상임위와 관계 있는 직업을 가졌는지를 파악하지 못

한 채 이뤄졌다.

또 27일 치러진 하반기 교육사회위원장 선거에 출마한 김동식(70·서구2) 의원도 소속 상임위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의 경우 지난 2006년까지 자신의 명의로 상·하수도 전문건설업체를 운영했으며, 지난 25일까지 광주시의회 자신의 홈페이지내 '의원 소개란' 코너에 개인 사무실 전화번호 상·하수도 건설업체 전화번호를 그대로 사용했다. 이같은 의혹이 불거지자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시의회 안팎에서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조례를 제정한 만큼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행안부는 최근 지방의원의 직업 관련 겸직 금지 범위를 확대하고 겸직 신고 의무화하는 한편 지방의원의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관련 영리행위를 제한하고 배우자 등 이해 관계인은 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금지하는 조항을 담은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

시의회 교사회위원장 단독 출마 김동식 의원 낙선

광주시의회 하반기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에서 단독 출마한 의원이 당선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시의회는 27일 제1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교사회위원장 보궐선거에 단독 후보로 등록한 김동식(70·서구2) 의원에 대해 2차 투표까지 실시했으나 결국 당선을 확정하지 못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재직 의원 18명 중 과반수(10표)를 얻은 경우

교육사회위원장에 선출되지만 1차 투표에서 18명 가운데 찬성 9표, 무효 9표를 얻어 과반 득표에 실패했고 2차 투표에서도 찬성 8표, 무효 10표로 과반수를 얻지 못해 위원장에 선출되지 못했다.

시의회는 이에따라 오는 29일까지 교사회위원장 후보 등록을 받은 뒤 내달 1일 오전 임시회 본회의에서 교사회위원장을 선출할 계획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광주시교위 의장 선거에 무슨 일이?

제5대 광주시교육위원회 하반기 의장에 당초 약속대로 알려진 전원범(63·광주교대 교수) 위원이 당선됨에 따라 교육청과 교육위원의 관계 설정과 교육위 내부 갈등 여부 등을 놓고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전 위원측은 27일 의장 선거를 앞두고 전격적으로 정견발표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교육위의장 선거는 속칭 '교황식 선출방식'으로 명시적 후보자나 정견발표 없이 이뤄진 것이 관례였다.

전 위원은 정견발표를 통해 집행부 견제와 감시 기능 강화,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고 설립 산증 대책, 교사 및 학생 인권조례 제정, 전인 교육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전반기 부의장인 전 위원은 특히 "항간에서는 교육위가 집행부와 밀월 관계에 있다는 말조차 퍼지고 있다"며 현 교육위가 집행부 견제와 감시라는 기본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했다. 이에 대해 이승현 현 의장은 "근거 없이 교

육위와 집행부 관계를 '밀월'이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 해명하라"고 요구해 이날 회의 분위기가 썰렁해졌다.

전 위원은 이후 당선 수락연설을 통해 "실제로 사석에서 '밀월' 운운하며 교육위를 비아냥거리는 투의 말을 많이 들었으나 공석에서 발언한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취소하겠다"고 해명했다.

전 위원의 의장 당선에 의외인 것은 하반기 의장단으로 '문동주의 의장 - 서재의 부의장 체제'가 굳어졌다는 설이 교육계에 파다했기 때문이다. 전교조 세력이 교육위 의장 선거에서 먹혀 들었다는 점도 새롭다.

교육 위원들간 내부 갈등 수면 위로 관례 깨고 깜짝 '정견발표'... 이번 연출

의장 선거 전 전교조 출신 윤봉근 위원이 교황식 선출방식이 아닌 의장 입후보 의사가 있는 위원에 대한 정견발표를 제안하자 전원범, 박기훈, 장휘국 위원이 일제히 동의했고, 전 위원은 기다렸다는 듯이 정견을 발표했다. 결국 전 위원의 당선에는 전교조 출신인 윤봉근, 장휘국 의원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교육계 안팎에서 차기 의장단으로 거론되지 않았던 인물이 새 의장단에 올랐다는 것은 집행부와 의 신성한 긴장관계를 예상케 하는 부분이지만, 동시에 교육위원간 갈등도 심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고 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정책연구원 창립

원장에 김효석 의원



민주당의 '싱크탱크' 역할을 할 '민주정책연구원'이 27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창립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당내의 정책통인 김효석(사진)의원이 원장을 맡은 민주정책연구원은 민주당의 재집권에 필요한 비전과 정책을 개발하는 '정책 발전소'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정국 현안에 대한 전략과 대응

방안을 마련해 중앙당의 전략기획 부문을 뒷받침하는데도 일조한다는 계획이다.

연구원은 연구기획위원회를 통해 시민사회 등 외부와 당을 연결하는 매개체 역할을 담당하도록 해 각종 현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과 정책 반영에 힘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